

**LG전자 디지털파크 “안전경영의 달인”**

LG전자(주) 디지털파크가 올해 최고의 안전기업으로 선정됐다.

소방방재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이 주관한 '2011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안전대상은 평소 기업경영에 있어 안전을 최고 가치에 두고 있는 기업들과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적극 확산해 온 개인 및 단체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심사결과 종합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상의 영예는 LG전자(주) 디지털파크에게 돌아갔으며, 그 외 국무총리상은 삼성SDI(주) 기흥사업장,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 등이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울산시설관리공단 등 12개 기업 및 개인, 소방방재청장상은 GS칼텍스(주) 대구저유소 등 4개 기업이 수상했다.

심사를 맡은 광운대학교 노삼규 교수는 “경영층의 안전에 대한 노력을 비롯해 기업 내 안전시스템의 정착상황, 법규가 요구하는 기본 안전시설, 합리성에 입각한 추가적 안전조치, 안전을 위해 투자한 실적 등 경영 전반을 심사에 고려했다”라며 “이들 수상기업 모두 안전기반이 탄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안전에 두는 등 본상이 지향하는 바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방기성 차장은 “이번 시상식을 통해 안전에 대한 투자가 사회 전체의 공익을 실현하고 기업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인식이 경영철학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 “수상기업들의 우수사례가 널리 전파되어 온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국노총 “지방이양 막아달라” 의견 전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산업안전보건 사무의 지방이양 저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월 10일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산안사무 지방이양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노총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수행 사무,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에 대한 사무,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개정안에 대한 노총의 반대 이유가 상세히 담겼다.

먼저 관리책임자 교육부분이다.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수행주체인 재해예방전문기관은 중앙 부처에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재해예방기관의 질적 하락 및 기관 난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노총은 지자체의 경우 안전보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담수행인력도 없어 직무교육 수탁기관의 등록, 평가, 등록, 취소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두 번째로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노총은 중앙정부(고용노동부)가 기계·기구 등의 제조 및 설계시 원천적인 재해예방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고 지원내용, 등록 및 관리 등은 전문적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위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과 관리체계가 없어 동일한 품목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역에 따라 중복 지원될 우려가 크다고 노총은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총은 사업장 내의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해 줘야 하는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할 경우 오히려 감독관의 역할이 축소 및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노총은 지자체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기준이 다름으로 인해 불평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위촉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분쟁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노총은 이들 내용을 전하며, 김성순 환노위 위원장이 지방이양을 저지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성순 위원장은 “대부분의 문제점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9월말 현재 산업재해자 69,066명, 산재율 0.48%**

고용노동부가 3/4분기 산재통계, 즉 9월말까지의 산업재해자수 및 사망자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의 산업재해자수는 총 69,066명, 재해율은 0.48%로 기록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 재해자수는 3,005명(4.2%), 재해율은 0.01%p(2%)가 각각 감소한 수치다.

9월말 현재 사망자수는 1,58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0명(0.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의 경우 1.09%로 지난해와 차이가 없었다.

재해자수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24,051명, 기타의 사업 22,653명, 건설업 16,053명 등이었다. 기타의 사업이 전년동기 대비로 7.7%(1,881명), 제조업이 4.1%(1,025명) 감소한 것에 비해 건설업은 0.5%(79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해유형별로 보면 전도 14,957명, 추락 9,795명, 협착 11,756명 등이었다. 이들 3대 재래식 재해는 모두 전년동기 대비로 감소했다. 감소폭은 전도 5.3%(840명), 추락 2.2%(218명), 협착 5%(141명) 등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23,576명, 5~49인 33,242명, 50~99인 4,473명, 100~299인 3,927명, 300~999인 1,644명, 1,000인 이상 2,204명 등으로 나타났다. 역시 전 규모에서 감소한 가운데 감소폭은 5인 미만 0.6%, 5~49인 3.7%, 50~99인 10.7%, 100~299인 15.6%, 300~999인 11.7%, 1,000인 이상 4%였다.

이외에도 재해자는 지역별로는 중부청(24,420명), 연령별로는 50세~54세 근로자(11,577명), 질병자에서는 요통질병(2,806명)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여수산단에도 안전교육장 건립해달라”

여수산단 내에 건설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가 추진된다.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 내에 건설안전 체험교육장을 건립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간 7만명에 달하는 지역 건설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호남교육장(전남 담양군 소재)까지 가야한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 경남, 경북 등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대형건설사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안전체험장이 다수 있지만, 유독 전남지역에는 체험시설이 담양 한 곳밖에 없는 상황이다. 담양이 전북과 인접해있다는 점을 볼 때, 실질적으로 전남 지역에서는 건설안전 체험장이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회사는 건설현장에 설치된 간이 안전체험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등 큰 불

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1~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담양까지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등 건설근로자들의 불편함이 크다”며 “건설 안전체험교육장이 건립되면 교육 편의는 물론 산업현장 사고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정부, ILO 직업성 암 협약 비준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주요 협약 중 하나인 ‘직업성 암 협약(제139호)’ 비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발암물질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암 관련 산재 인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ILO 협약 비준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전문가 검토 및 ILO 사무국과의 협의를 계속해 왔다”라며 “국내법과 합치된다는 판단으로 이번엔 직업성 암과 관련한 139조 협약을 비준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 비준에 따라 앞으로 작업상 노출이 금지되거나 허가 또는 관리 대상의 발암성 물질 및 인자가 주기적으로 정해진다. 또한 발암성 물질 또는 인자에 노출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가 규정되고, 기록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이외에도 위험인자와 관련된 노출이 측정되고,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진단이나 검사, 조사 등이 실시된다. 아울러 이번 협약 비준으로 앞으로 발암성 물질 또는 인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은 관련된 위험요인 및 취해야 하는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모두 제공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업성 암 유발 물질 등에 대해 제조·수입·양도·제공을 금지하거나 제조·사용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 비준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법집행 및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연말까지 보호구 착용 대대적인 단속

오는 12월 31일까지 건설현장에서 보호구 착용실태에 대한 점검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점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11~12월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현장 ▲근로감독관의 출장 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이다.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이 점검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 외에도 내년부터는 매월 4일을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의 날’로 지정·운영하면서 건설현장에 보호구 착용 문화를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